열린세상

‘기승전결’ 공인의 자세

정정용
이사 겸 논설주간

검찰이 최근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혐의는 업무상 횡령·배임과 준사기, 보조금관리법·지방재정법·기부금품법 위반 등 무려 8개에 달한다.

특히 기소된 8개의 혐의 중 개인 유용 혐의가 놀랍다. 정대협의 후원금 및 공금에서 윤 의원이 개인적으로 임의 소비한 금액이 1억여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검찰 발표대로라면 상상 이상의 충격이다. 윤 의원이 즉각 반발하고 향후 재판에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어찌됐건 검찰이 발표한 혐의만 놓고 보면 놀라울 따름이다. 무엇보다 근로정신대나 위안부 문제 등은 우리 국민들에게 반일의 상징과도 같은데 관련 시민단체 핵심 인물이었던 그가 이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는 자체가 충격적이다.

최근 이슈의 중심에 선 공인들

와중에 국회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휴가 의혹 공방으로 날이 새고 저문다. 군에 간 아들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추 장관이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서 시작된 공방은 끝이 어딘지 모를 지경이다.

지난주부터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고 코로나19 감염병이 언제 끝날지 모를 와중에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방이고 폭로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사실 추 장관 아들 군 황제 휴가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은 벌써 수개월째 반복돼 오고 있다. 야당이 새로운 사실이라며 폭로전을 펼치면 여당은 이를 방어하는 양상이다. 공방전이 보수-진보 진영간 힘겨루기 양상을 띠며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 그나마 검찰이 관련 의혹의 진실을 캐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니 만시지탄이다.

그런데 이 두가지 사안에서 중요한 공통점을 유추할 수 있다. 검찰에 의해 기소된 윤미향 국회의원이나 야당으로부터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추미애 장관 모두 국민들을 대신해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국회의원과 장관이라는 최고위직 ‘공인’이라는 점이다.

‘공인’이란 특정 집단, 혹은 국민들을 대표함으로써 항상 주목을 받고 이를 기반 삼아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해 나가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들의 생각이나 행동 하나하나는 대중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이슈를 만들어 내곤 한다. 특히 국회의원이나 단체장들은 그 파급력이 엄청나기에 더욱 그렇다. 따라서 공인이라면 자신의 언행을 엄격히 관리하고, 분명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이같은 차원에서 집권여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윤미향 의원이나 5선의 국회의원을 지내고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있는 추미애 장관은 현재의 상황을 엄중히 보고 몸을 최대한 낮출 필요가 있다.

물론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일반 국민처럼 억울함이 있으면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통해 끝까지 다퉈야 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만의 하나, 혹은 본의 아니게 잘못이 있을 수 있고 보는 시각이 다양하기 때문에 더욱 몸을 낮추고 진실을 기다려야 한다.

특히 추 장관 아들 군 특혜휴가 의혹의 경우, 야당의 지속적인 공세에도 현재까지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야당의 공세가 지나친 정치적 공세가 아니냐는 시각들이 많다. 따라서 추 장관은 그 스스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신 되돌아보는 전환점 삼길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과의 사투로 인해 한번도 겪어보지 않은 가혹한 고통을 겪고 있다. 지난 여름엔 집중폭우와 역대 최장의 장마, 줄줄이 이어진 태풍 등 자연재해가 이어지며 최근 수십년 내 가장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때 공인들의 자세는 곧 국민들의 사기와 직결되는 만큼, 위 두가지 사안을 계기로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최대한의 실현까진 아니더라도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두들 되돌아 볼 일이다. 그것만이 기승전결 공인의 자세다.

기고

가을 산행의 또 다른 불청객, 말벌

최민철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장

여름 끝자락에 3차례의 태풍이 지나가더니, 이젠 날씨가 제법 선선하다. 청명한 날씨 때문인지, 그래도 코로나19의 여파로 예년만큼은 아니지만, 등산이나 벌초, 성묘를 위해 산을 찾는 이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한반도의 산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가장 무서운 습격자는 바로 말벌이다.

말벌류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는 한 주간 평균 온도가 27~28도인 8~9월이다. 이 시기는 벌들이 교미, 여왕벌 육성, 애벌레 육아 등으로 가장 바쁜 시기인데, 올해처럼 명절인 추석이 10월 초인 경우, 벌 쏘임 피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라는 말이 있듯, 벌에 대해서 잘 알고 대처하면 벌 쏘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시민들에게 말벌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기 위해, 말벌의 종류별 출현 시기 및 벌집제거 출동 건수 등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먼저 올해 8월 말까지 광주시에서 벌로 인한 출동 건수는 총 1,665건이다. 그 중 1,381건을 차지하는 말벌류의 출현 빈도는, 쌍살벌 749건(45%), 외래종인 등검은말벌 344건(20.7%), 말벌 281건(17%), 장수말벌 7건(0.4%)순으로 나타났다.

각 말벌의 특징을 살펴보면, 쌍살벌은 4월부터 출현해서 6월 53건, 7월 139건, 8월 537건으로 8월에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등검은말벌과 말벌은 5월부터 출현해서 7~8월에 월평균 168건으로 점진적 증가한다. 그리고 장수말벌은 소수이기는 하지만 7월부터 출현한다. 말벌류 중 가장 많이 출현하는 쌍살벌은 크기가 15~22㎜이며 국내에서 가장 흔한 종으로 관목가지, 처마 밑, 돌담사이 등에 삿갓모양의 둥지를 짓는다. 독성은 심하지 않지만 꿀벌보다는 훨씬 강하다.

두 번째로 많이 출현하는 등검은말벌은 외래종으로 20㎜ 정도의 크기이며 독성은 일반 벌의 15배 이상이고 벌집은 타원형으로 토종말벌집보다 2~3배 큰데, 대부분 10~15m 높이 나무 꼭대기, 도심 가로수나 전봇대, 아파트 지붕 등에 집을 짓는다. 게다가 번식력과 공격성도 토종 말벌보다 훨씬 강할뿐더러, 매일 수천마리의 꿀벌을 사냥해 양봉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

마지막으로 가장 조심해야 할 장수말벌은 크기가 50㎜ 정도이고 독성은 꿀벌의 40배에 이르며, 쏘이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사람의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 장수말벌은 자주 출현하지 않지만, 산비탈 등에 주로 집을 지어 산행이나 벌초 시 벌집 입구를 밟으면, 벌들은 벌집이 공격당했을 때 가장 흥분하기 때문에 집단으로 장수말벌에 쏘일 수 있다. 말벌의 습격을 당하는 경우, 머리 부분을 보호하면서 즉시 20m이상 떨어진 곳으로 피하고, 팔을 휘두르는 등 큰 몸짓은 벌을 더욱 자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말벌의 공격성향을 보면 말벌은 노란색·흰색 등 밝은 계열의 색 보다는 검은색이나 갈색 등 어두운 색에 강한 공격성을 보이는데, 그 이유는 말벌의 천적이 곰(검은색), 담비(갈색), 오소리(회색) 같은 포유동물이어서 짙고 어두운 색에 민감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소방청에서는 지난 9월 4일, 벌쏘임 사고 ‘경보’를 발령했다. 경보는 벌 쏘임 사고가 주 370건 이상, 벌집제거 출동이 주 1만 건 이상 2주 연속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 발령되는데, 이 기간에 안전한 야외활동을 위해 몇 가지 당부 사항이 있다.

벌초나 등산 등 야외활동 시 피부를 완전히 덮을 수 있도록 긴 옷과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고, 벌을 유인할 만한 향수나 화장품의 사용을 자제하며, 벌초작업 전에 무덤주변에 벌의 왕복 비행을 관찰하여, 무덤 주변에 구멍이나 흙무더기가 있으면 말벌의 둥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변을 살펴야 한다.

만약 벌에 쏘였을 때는 쏘인 부위의 감염방지를 위해 깨끗이 씻고 얼음찜질을 해주면 통증과 가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다. 특히, 알레르기 증상이나 과민성 쇼크가 올 경우 신속하게 119로 신고하여 병원의 응급조치를 받아야 한다.

독자광장

아동학대 예방 우리 모두 동참을

최근 인천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수업을 하는 중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단둘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발생한 화재로 중화상을 입은 초등학생 형제 가운데 장애가 있는 10살 큰아들이 과거 엄마로부터 방치뿐 아니라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아동학대는 만 18세 미만의 어린이를 신체·정신·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아동학대 가해자 중 대부분인 75.6%가 부모이고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만 1,389건으로 전년 대비 13.7% 늘어나는 등 아동학대 사건이 있따라 발생, 국민적 공분을 야기하고 있다.

피해아동 성별은 남자아이가 1만 5,281건으로 50.9%로 여자아이보다 약간 많았고 만 13~15세의 아동이 전체 23.5%로 가장 많았다. 아동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총 2만 3,883건으로 79.5% 차지해 가장 많고, 주요 아동 돌봄기관인 학교가 2,277건(7.6%), 어린이집 1,371건(4.6%), 유치원 139건(0.5%) 순이었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 2만 2,700건(75.6%), 대리 양육자 4,986건(16.6%), 친인척 1,332(4.4%)순으로 확인됐다.

피해아동 발견율은 3.81%로 여전히 한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른 아동은 총42명으로 이중 0세~1세의 아동이 45.2% 차지하여 신생아 및 영아가 학대에 의한 사망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신고의무자의 미신고시에도 아동학대 처벌법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는 등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행정당국에서는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다시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하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아동학대가 발생되는지 세심히 살피고 감시해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영암경찰서 학산파출소 경위 신권재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3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고장 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3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朴哲弘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金善男 편집국장 朴元雨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010-4601-5323
정치부 (062) 720-1060~62 편집부 (062) 720-1070
경제부 (062) 720-1066~67 논설실 (062) 720-1032
사회부 (062) 720-1050~54 전산실 (062) 720-1033
사회2부 (062) 720-1044 월간국 (062) 720-1006~07
동부권본부 (061) 743-4200~01 관리국 (062) 720-1012
문화부 (062) 720-1071 판매국 (062) 720-1004
체육부 (062) 720-1041 사업국 (062) 720-1011,1099
사진부 (062) 720-1040 광고국 (062) 720-1016~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기사제보 •TEL (062) 720-1050~54 •사회부장 010-6633-8826 •FAX (062) 720-1080~81 •E-mail jndn@chol.com
광고문의 •TEL (062) 720-1016~17 •FAX (062) 720-1020 •E-mail jnmi1000@hanmail.net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98 (사동)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 인쇄처 주식회사 광주일보사

사설

한전공대 반드시 정상개교 해야한다

한전공대 건물을 짓는 공사가 내년 5월 착수된다는 소식이다. 정상개교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지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전공대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이자 대선 공약사업이라는 점에서 정상개교는 당연한 귀결이다.

전남도와 한전은 지난 17일 한전공대 1단계 교사 신축과 함께 에너지신기술연구소 일부 공간을 임대해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절차를 감안할 때 정상개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개교 필수 교사면적 4,000㎡를 내년 5월 일반건축 방식으로 진행한다. 나머지 1단계 2만7,000㎡는 내년 7월 착공에 들어간다.

한전은 캠퍼스 1단계 건축 준공계획을 당초 예정된 2024년 1월에서 2023년 7월로 단축했다. 2023년 3월까지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임대교사 사용기간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개교 핵심시설은 총장실과 행정실, 강의실 등이다. 부족한 공간은 내년 9월 완공 예정인 에너지신기술연구소 일부를 활용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한전은 교사 등에 대해 국가균형위와 이미 협의를 마쳤다. 문제는 교사 설립과 임대교사 활용 특례조항이 포함된 특별법 개정이다.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내달 대표발의키로 했다. 전남도는 21일 한전공대 설립 광주·전남 범시도민 지원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보고할 계획이다.

한전공대는 입학정원 350명(학사 100명·석사 200명·박사 50명)에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교사 확보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 등이 결국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공대 정상개교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국정과제이자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다.

택배 노동자 목소리 귀 기울여야

택배 분류작업 거부를 선언한 택배 기사들이 정부의 인력 충원 대책에 따라 최근 거부 방침을 철회했다. 정부가 택배사들과 논의해 다음 달 16일까지 하루 평균 1만여명의 분류작업 인력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명절 연휴를 코앞에 둔 시기에 배송 차질을 피해 그나마 다행이다.

급한 불은 껐지만, 택배 노동자의 과로 해소라는 근본 과제는 여전하다. 대책위에 따르면 분류 작업은 택배 노동자들이 처한 장시간 노동의 핵심 원인이다. 하루 13~16시간 노동의 절반을 분류작업에 매달리면서도 그에 합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호소다. 택배 기사들은 배달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분류 작업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 받는다는 얘기다.

미증유의 감염병 팬데믹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안정화 시기가 요원한 만큼 택배 수요의 지속은 불 보듯 뻔하다. 이익 경쟁에 몰두하다가 현장 업무 종사자 보호 의무를 잊는 일은 없어야 한다. 임시방편의 땜질식 처방에 그친다면 택배 기사들의 재해 위험 노출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주요 사회 변화상 중 하나가 비대면 활동 증가다. 이에 따른 택배 물량 급증 현상은 요즘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쉽게 느낄 수 있다. 온라인 물건 구매는 전염병 감염 위험을 줄여주는 요소 중 하나다. 감염병 극복에 택배 기사들의 수고가 큰 힘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택배 업계에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 보인다. 업무량에 합당한 보수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사시 선제적인 인원 충원 시스템 구축, 휴게 시간 보장 등 꼼꼼한 건강 관리, 방역 강화 등이 시급하다. 근본적인 세부 대책과 철저한 이행을 서둘러야 할 때다.

‘형평성 논란’ 재난지원금 보완책 필요

기자수첩

이나라
경제부 차장대우

지역 여행업계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도 이번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역 여행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억 원에 달하던 매출은 올해 들어서는 사실상 ‘0원’에 가깝다. 실제 올해 광주지역 여행업체 468곳 가운데 18곳이 폐업했으며 2곳이 휴업에 들어갔다.

지난 3월 이후 하늘길이 막히면서 내국인의 해외여행과 외국인의 국내여행이 중단됐다. 한국관광공사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 관광수입은 11억 9,0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78.6%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03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여름휴가철을 계기로 여행업계 분위기가 반짝 되살아나는가 싶더니 최근 들어 광주·전남지역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대응체계가 강화되면서 국내 단체여행 신청마저 제약이 걸려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여기에다 국외여행보다 국내여행을 단체보다는 소규모로 지역과 가까운 여행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여행의 트렌드 변화 영향도 컸다. 봄과 가을 등 관광특수는 이제 그야말로 옛말이 됐다.

여행업계 사업자와 종사자들은 6개월 이상 별다른 수입이 없어 배달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근근이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에서도 이번 달부터 여행사를 대상으로 홍보비 일부를 지원하고 나섰지만, 취재 중 만난 여행업계 종사자들은 ‘뜬구름 잡기식 이야기’라며 시큰둥했다. 이들은 여행을 문의하는 사람이 없는데 홍보비 지원이 무슨 소용이냐는 반응이다. 실질적인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는 것이다.

물론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해법이 될 순 없다. 여행업계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업계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지원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오고 정책의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높다.

정부는 여행업계처럼 지원취약업종이 없도록 추가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